

# “국민 선택권 보장... ‘공정 선거’ 최소한 조건 마련”

**‘추 파기환송심 연기’ 지역 각계 반응**  
姜 “당연한 이치” 金 “소추 중단 입법”  
전진숙 “사법부 대한 국민 불신 반영”  
전문가 “추 대세론 공고해지는 발판”  
‘불소추 특권’ 대선 후 핵심 쟁점으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도 대선 후로 미뤄야 한다”며 “미국도 관례상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를 중단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사법 엘리트들의 정치 개입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캠프 골목상황부실장인 전진숙(북구)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적인 반발이 있었다”며 “재판부가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이들 만에 서명 운동에 100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대규모 서명 운동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반영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아직 이재명 후보가 네 번의 재판을 치러야 하지만, 가장 큰 이슈가 해결되면서 대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요구가 반영된 만큼, 민주당은 이 기회를 살려 꼭 내란 상황을 해결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지만, 판·검사나 임명직 관료가 선택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이번 연기는 헌법정신을 지킨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사법쿠데타를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위헌·위법한 사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전문가들 또한 이번 파기 환송심 연기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정락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는 상황에서 이번 연기는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여론을 봐도 ‘왜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느냐’는 반응이 많다”며 “이번 판단은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 셈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더욱 공고해지는 발판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조계에서는 ‘소추’를 단순히 기소만으로 제한할지, 재판 유지까지 포함할지

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명확한 판례나 통일된 해석이 부재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라며 “재판부마다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고기일 연기를 통해 이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이는 향후 정치적 부담은 물론, 법적 정당성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 이재명 “죽을힘 다해 새 나라 만들 것”

전북 지역 찾아 지지 호소  
“농촌 기본소득 어렵지 않아”  
9~10일 ‘영남 신라벨트’ 순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전북 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호남 민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장 탄핵소추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당의 움직임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지방순회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이다.

‘준비된 후보’로서 흔들림 없는 민생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대세론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는 전북 진안군을 찾아 골목상권 상인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이 어려운 게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원해주면 갈치조림집, 식당 등 다장사가 잘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퍼주기라고 하는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쓰는 것인데)

퍼주는 것은 왜 그렇게 아까워하나”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또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이 심장과 머리만 커지고 손발이 썩으면 살 수가 있겠나. (지방)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추가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는 현장에서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듯 “죽지 않고, 죽을힘을 다해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다. 총을 든, 폭탄을 든 계엄군을 막은 것이 바로 국민 아닌가”라며 “우리 위대한 국민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국내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로지 머리에 든 것이라고는 ‘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까’, ‘내 정적을 어떻게 죽여볼까’, ‘내가 죽고 친구의 범죄를 어떻게 덮어볼까’ 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중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는 것뿐”이라며 “그러다 결국 생각해낸 것이 비상계엄 내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담벼락에 대고 고향이라도 쳐라’라고 말씀했다. 행동을 합시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전북 임실·익산을 방문하고, 충남 청양과 예산을 들르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9~10일에는 경남·경북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3차 경청투어에 나선다.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는 9일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게 될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3차 경청투어 ‘영남 신라벨트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영천·칠곡·김천·성주·

고령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이 후보는 지역별 시장 방문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경북 지역 주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0일 경남 창녕과 함안·의령·진주·사천·하동을 순회하는 ‘영남 신라벨트편’ 두 번째 일정을 진행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 바른 복구를 위해 냉철하고 확실하게!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복구의회는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제보를 기다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보기간** 2025. 5. 1.(목) ~ 5. 31.(토) [한달간]

**제보내용** 복구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

**제보방법**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등

※ 문의 : 의회사무국 의사팀(☎062-410-8506)

**의회** 광주광역시 복구의회

